

경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정운찬의 『한국경제 아직도 멀었다』
강철규의 『재벌개혁의 경제학』을 중심으로

김 군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공병호 | 자유기업센터 소장

지난달 25일 김대중 대통령과 5대재벌 총수들은 정·재계 간담회에서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건전성 강화 등 3대 개혁과제에

합의했다. 한편 대우그룹 25개 계열사 가운데 주력 12개사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돌입했다. 개혁 프로그램이 숨가쁘게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개혁의 과제와 전망을 담은 두권의 책이 나란히 나왔다. 전문가 두분을 모시고 경제개혁 어떻게 할 것인지 들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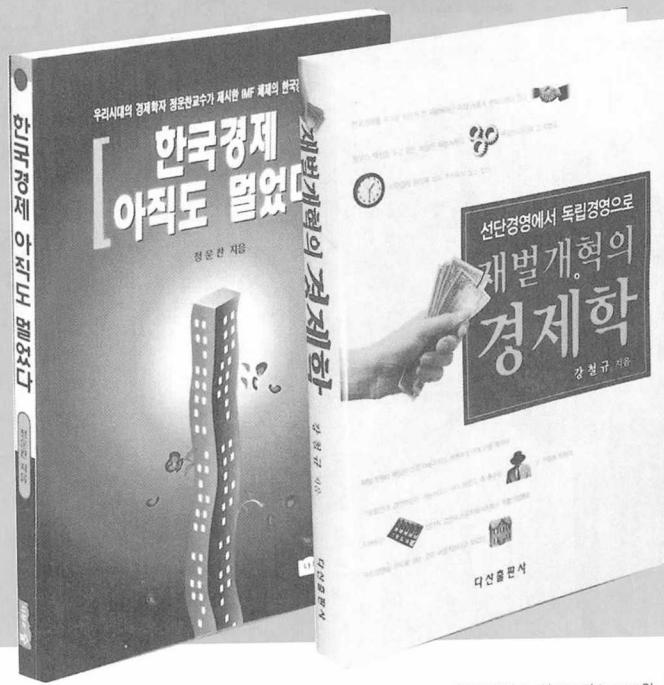
공병호 ————— 두 책에서 논의한 경제개혁의 과제와 전망부터 얘기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김군 ————— 강철규의 『재벌개혁의 경제학』은 경제개혁의 핵심이 재벌개혁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편 정운찬의 『한국경제 아직도 멀었다』는 시사적인 문제에 대응한 글들입니다. 사소한 점에서는 생각이 다를지라도 큰 방향에서는 두 저자의 입장에 찬성합니다.

개혁적 케인즈주의와 정부의 시장개입

공병호 ————— 정운찬은 『IMF와 한국경제』 부분에서 신자유주의는 한국 경제의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개혁적 케인즈주의'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저는 강력한 정부주도하에 재벌의 선단식 체제를 해체하자는 주장에 대해 입장이 달라요. 또한 마지막 장인 〈경제개혁의 방향과 과제〉에서 "한국경제의 궁극적 지향점은 영·미식 자본주의일지도 모르지만, 현재의 위기를 고려할 때 당분간은 2차대전 후의 일본식 또는 서독식 자본주의를 참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면서 정부가 판을 다시 짜기 위해 개혁추진세력을 등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김군 ————— 정운찬의 개혁적 케인즈주의는 전통적인 케인즈주의와는 다릅니다. 시장이 덜 발달됐거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현실에서 정부가 경제주체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두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정글의 법칙이 관철된다. 그러므로 시장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재벌을



나무와숲/A5신/216면/7500원

디산출판사/A5신/382면/16,000원

의 저항을 둘파하기 위해 강력한 개혁주체를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었습니다.

공병호 ————— 저도 지금 상태에서 자유방임이 필요하다거나 정부가 시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개입 방식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김군 ————— 정운찬은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벌에 대해 시장규율이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한편 IMF위기의 원인이 재벌의 중복과잉투자이기 때문에 재벌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지요. 하지만 현재 재벌의 중복투자가 여전하고 구조조정도 미약한 것을 비판합니다.

강철규도 재벌의 구조조정과 제도개선이 미약하다는 점을 비판하는데, 재벌개혁 이후는 독립경영과 독립기업체제로 가야 한다는 점이 특기할 만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강철규의 주장에 대해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비관련다각화가 곤란하다는 것은 누구나 동의합니다. 하지만 관련다각화와 전문화의 문제를 비교해볼 때 어느 것이 옳은지는 경제학적으로 답이 없어요.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요.

재벌개혁 목표의 도그마화 경향

공병호 ————— 현재 재벌개혁의 목표나 방향이 상당히 도그마화된 경향이 있어요. 예컨대 선단식 체제는 독립경영체제로 나가야 된다든지 한국의 재벌은 업종전문화된 기업으로 변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서 판단이 잘 서

“선단식 경영과 독립경영

문제는 현단계에서

쉽게 말할 수 없지만

오너경영 문제는 다릅니다.

효율성이나 공정성 원리에

비춰서도 총수체제는

해소돼야 합니다. 일단

이 문제를 불식하고 다음

체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김준 교수



공병호 소장

“현재 재벌개혁의 목표나 방향이 도그마화된 경향이 있어요. 선단식 체제는 독립경영체제로 나가야 된다든지 재벌은 업종전문화해야 한다는 논의에 대해서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저는 결국 시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 않습니다. SK텔레콤·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등 몇 개의 블루칩 기업은 지금 당장이라도 독립기업체로 거듭날 수 있는 인프라가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모르겠습니다.

업종전문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한데, 지금 성공한 벤처기업들도 제휴관계를 맺거나 분사하는 기업이 늘어납니다. 메디슨의 경우도 별씨 10여개 기업으로 분사했습니다. 지분을 교환한 것까지 합치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따라서 업종다각화는 학문적으로는 쉽게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비즈니스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호합니다. 저는 결국 시장이 결정할 것이므로 제도개선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 선단식 경영이 바람직하나 독립경영이 바람직하나는 문제는 현단계에서 쉽게 말할 수 없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오너경영 문제는 다릅니다. 지분이 6~7% 밖에 안 되는 재벌총수가 기업을 지배해왔습니다. 삼성자동차의 예처럼 총수지배체제는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민주주의의 공정성 원리에 비춰서도 총수체제는 해소돼야 합니다. 일단 이 문제를 불식하고 다음 체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개혁의 도그마현상을 얘기하셨는데, 저도 부분적으로는 느낍니다. 하지만 절박성 때문에 일종의 과도한 발언을 하게 했다는 점도 이해해야 합니다. 관료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정치인들도 자기 잇속 쟁기기만 바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려다보니 무리한 주장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공병호 두 저자의 글은 총수 일인 지배체제의 배제와 선단식 체제의 해체를 통한 전문기업화 및 독립경영체제의 확립이 주요의제입니다. 오너경영 체제에 대해 말하자면 5~6%의 지분이라도 지배주주는 맞지요. 저는 지주회사를 인정해서 총수의 지분유지가 가능한 범위까지 통제·지배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에서 떨어져나가도록 하자고 주장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순환출자 같은 방식으로 총수가 계속 지배권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출자총액제한을 다시 부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외자계 기업에 많은 산업설비가 넘어갔을 경우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남미의 종속경제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이미 신문용지 시장은 100% 외자계가 장악한 상태입니다. 이 점을 현실적으로 논의해봐야 합니다.

김준 지주회사 문제는 선단식 경영이 바람직하나, 독립경영이 바람직하나는 문제와 맞물립니다. 지주회사에 대한 논의는 시점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개인적으로는 총수 1인 체제가 완전히 불식됐을 때 논의해도 늦지 않아요. 5대 재벌 가운데 삼성과 대우를 제외한 기업들은 총수체제가 더욱 공고하게 됐거든요. 이 상황에서 지주회사를 논의하면 재벌개혁의 틀을 흔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예가 출자총액제한 문제입니다. 98년 초 외국인과의 역차별 문제, 구조조정 등의 이유 때문에 이것이 철회됐지요. 하지만 원래 정책입안 때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상호출자를 더욱 강화시켜 결국 기업의 내부지분율과 부채자본비율만 높였거든요. 따라서 지주회사가 정당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기 위해서도 현재 진행중인 재벌개혁이 일단락돼야 합니다.

재벌의 중복과잉투자

공병호 내부지분율이 상향조정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즉 블루칩 기업의 경우 작년에 외자계 자본이 들어오면서 안정주 확보가 상당히 개선됐다는 점,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분거래가 많이 이뤄졌다 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제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해 논의해보죠. 재벌의 중복과잉투자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이 때문에 우리 경제가 고통받고 있지만 성장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중복과잉투자의 불가피성도 인정해야 합니다. 후발국으로 출발한 한국경제가 발전하는 데 기여한 점도 있고 환경적 요인도 작용했다고 봅니다. 예컨대, 현재 삼성자동차가 비난받지만, 투자결정이나 입지선정 과정에서 당시 경제팀과 YS의 입김이 영향을 미쳤거든요. 결국 정치의 영향력으로부터 재벌이 이익을 누리기도 했지만 피해자라고 할 수도 있지요.



“80년대 중반까지 재벌은 성장의 견인차역할을 했습니다. 정부가 경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재벌의 중복과잉투자를 해소시켰죠. 하지만 90년대 들어 정부가 시장개입에서 물러나면서 재벌의 팽창욕구를 견제할 장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재벌개혁과 함께 금융개혁도 필수적입니다.”

본지 회의실에서 가졌던
김균 교수(왼쪽)와 공병호 소장의 대담

김균 —————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재벌이 개혁의 대상이지만 적어도 70년대, 80년대 중반까지는 성장의 견인차였거든요. 그때도 재벌이 중복과잉투자했지만 정부가 사후적으로나마 경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해소시켰습니다. 하지만 80년대 말, 9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가 경제개입에서 물러났지요. 민주화의 대가라고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정부가 물러났을 때 재벌의 팽창욕구를 견제할 장치가 없었습니다. 특히 90년대가 그랬습니다. 금융이 이 역할을 맡았어야 했는데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재벌만 계속 둉치를 키웠습니다. 90년대 이후 재벌시스템은 이미 제도적 유효성이 소진됐습니다.

한편 삼성자동차 문제는 역설적이지만 경제조절 기능을 시장에 맡겨선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당시 자동차 시장에 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기업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정부가 간섭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엄청난 논리적 맹점을 지녔습니다. 먼저 삼성자동차가 한국경제에서 갖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몰랐고 실패했을 경우 퇴출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을 전혀 계산에 넣지 못했습니다. 퇴출비용을 고려하면 일개 기업인의 판단에 맡겨선 안됩니다. 결국 산업정책적 시각이 없었거나 산업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 있지요. 정치가 작용한 것은 안되는 밥에 재를 뿐인 거지요.

다. 금융부문의 소유구조 개선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이 없다는 것이 한계지요. 제2금융권과 재벌과의 연계차단은 늦었지만 잘하는 일입니다. 현재의 방향으로 금융개혁이 이뤄질 때 과연 금융이 경제와 균형의 역할에 충실히 할지는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금융소유구조를 어떻게 짜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정부가 손을 뗄 때 현식적으로 재벌이 아니면 가져갈 데가 없거든요. 이런 우리 사고의 한계를 만들어낸 것도 어찌 보면 재벌이지요. 공기업 민영화에서도 재벌과 외국 가운데 밖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거든요. 따라서 재벌개혁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공병호 —————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된 듯합니다. 우리가 환란을 겪은 것은 어찌 보면 경제학자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나마 두 저자가 경제적 보상에 관계없이 책을 쓴 것은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주장이 너무 강하고 논리적인 연결고리나 충분한 근거가 부족한 점을 보완했으면 합니다.

김균 ————— 두 저자의 책은 이론과 현실을 접목시키는 시도라는 점에서 경제학자로서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재벌개혁을 담을 수 있는 큰 틀을 체계화시키고 한걸음 더 나아간 비전을 제시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 정리 · 박천홍 기자

금융개혁의 전제도 재벌개혁

공병호 ————— 경제와 균형이라는 말씀을 잘 하셨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와 균형의 메커니즘이 금융개혁에 거의 손을 대지 못했고 오히려 제2금융권에 대한 허가를 남발함으로써 종금사의 부실을 심화시켰습니다. 게다가 건전성 규제 같은 메커니즘도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금융부분이 엉망이었다는 점에서도 경제위기의 원인을 찾을 수 있겠지요. 앞으로 한국경제의 사활이 재벌개혁 못지 않게 금융개혁에 달려 있다고 보지만 그 부분에 대해 납득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해선 자신이 없습니다.

김균 ————— 금융개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 동의합니

한국경제와 재벌개혁에 관한 책

제목	저자 · 역자 · 편자	출판사
한국재벌개혁론	김균 · 김대환	나남출판
재벌 : 성장의 주역인가 탐욕의 화신인가	강철규 · 최정표 · 정지상	비봉출판사
재벌과 한국경제	강명현	나남출판
한국경제, 죽어야 산다	정운찬	나무와숲
위기, 그리고 대전환	이병천 104 김균	당대
한국경제의 구조개혁과제	강철규 외	서울사회경제연구소
한국경제의 위기와 개혁과제	홍영기 외	풀빛
시장경제와 그 적들	공병호	한국경제연구원